

2025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법률·세무 특강

【 농 · 어업인을 위한 행정법 바로알기 】



ㅣ 법무법인 연
대표변호사 정용

강사 소개



법무법인 연 대표변호사 정용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임실, 순창군 고문변호사
- 진안, 장수군 법률구조위원
- 전북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강의 개요

1. 행정이란

- 행정의 의미
- 행정작용의 실제 사례

2. 행정쟁송이란

- 행정의 개념과 유형
- 당사자
- 관할
- 제소기간

3. 이해의 구조

- 절차의 적법성
- 법률적 근거 확인
-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4. 농어업인이 마주할 행정쟁송

- 사례중심

5. 집행정지

6. 마무리

• 행정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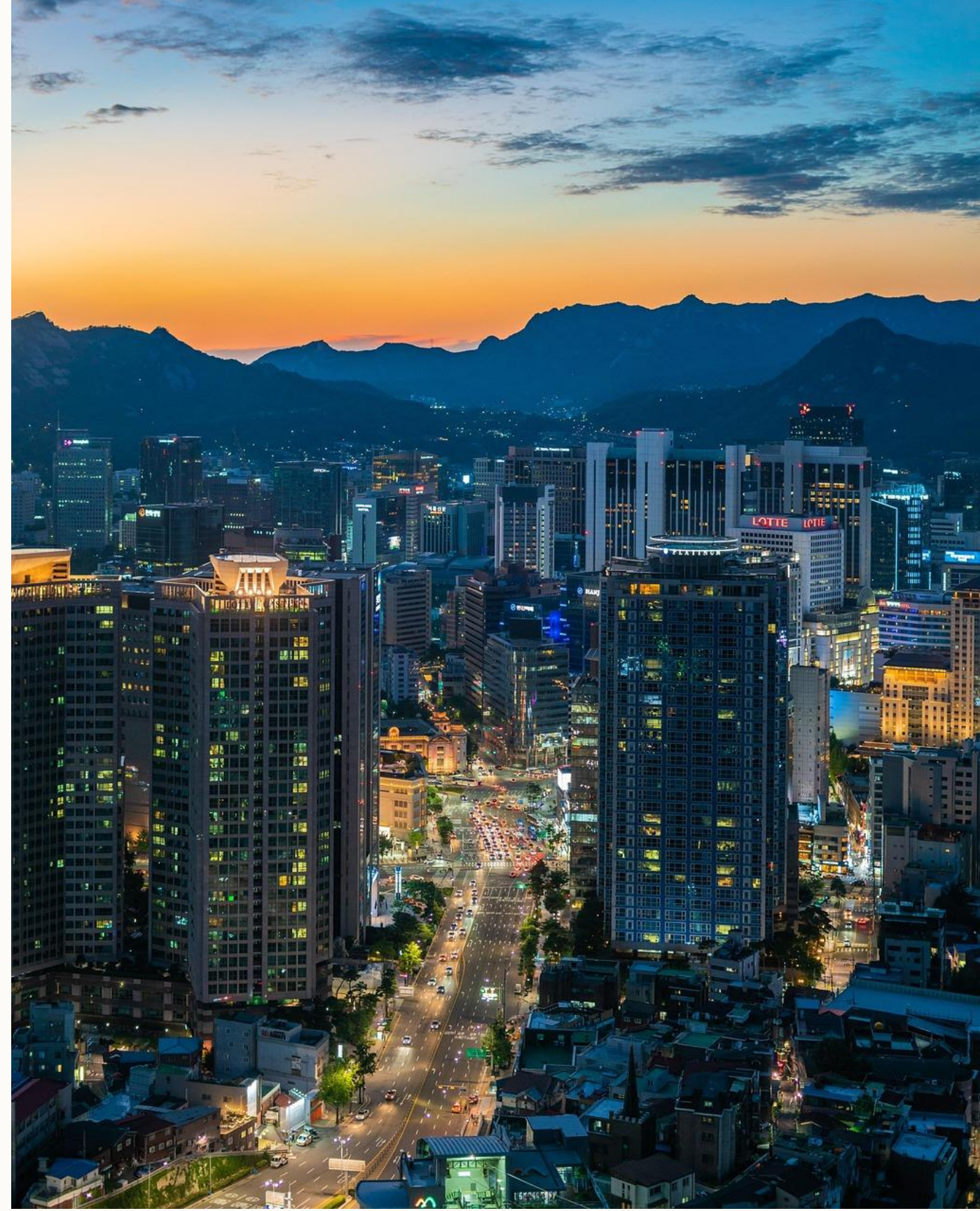
행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조직적 의미 : 국가행정조직
- 형식적 의미 : 행정기관의 활동
- 실질적 의미 : 국가작용

농어업인이 실제로 마주하는 행정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

즉 법률상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입니다.



— 행정작용의 실제 사례

인·허가 처분

건물을 지을 때 관할 관청이 인·허가를 해주는 것

금지·제한 처분

위법한 영업을 했을 때 영업금지를 하는 것

부담금 부과

개발행위를 했을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세금 부과

일정 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

행정제재

음주운전을 했을 때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것



— 행정쟁송의 개념

행정쟁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농어업인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리기관	행정기관 내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심리기간	통상 2~3개월	통상 1년 이상
의무이행명령	가능	불가능
필수 여부	토지수용, 특허 관련 쟁송은 필수	대부분 선택 가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업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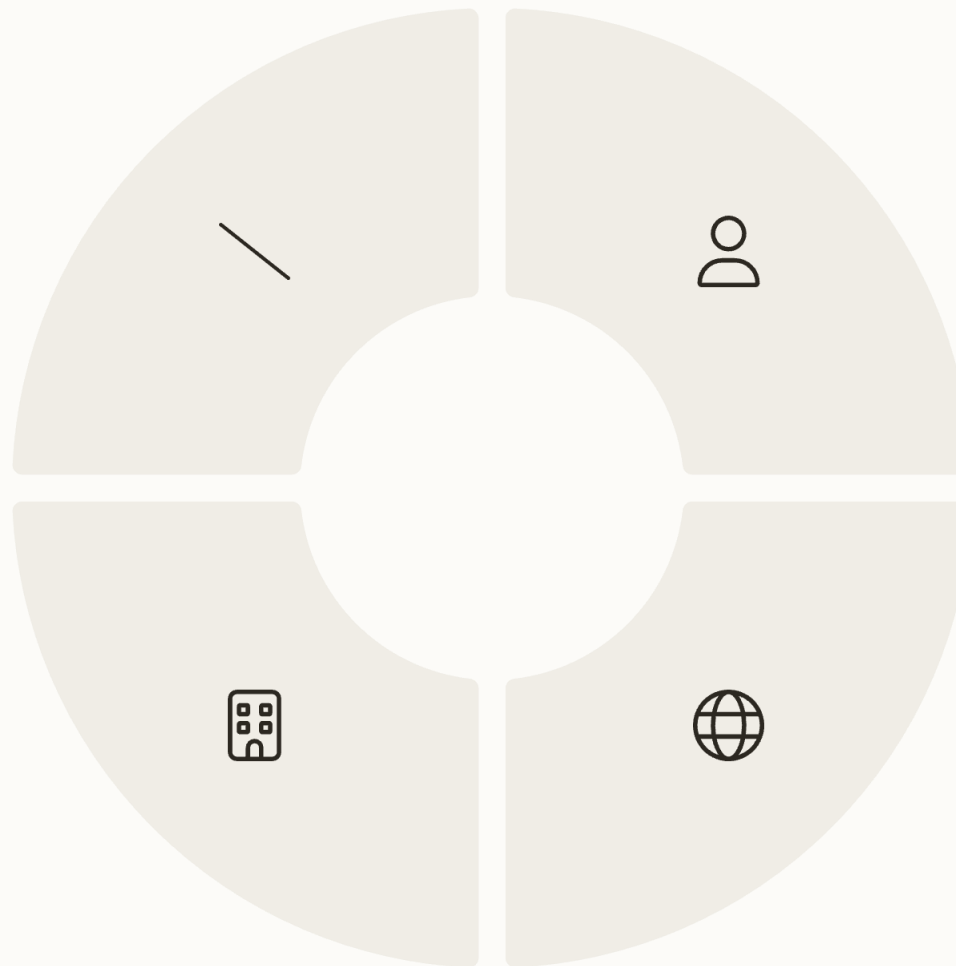
— 행정소송의 유형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농어업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민중소송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

—• 항고소송과 농·어업인

농·어업인이 주로 접하게 될 소송 유형은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농지취득, 어업권설정 관련 분쟁
- 각종 보조금 관련 분쟁
- 농업진흥지역지정취소, 농지전용불허가 분쟁
- 태양광설치 관련 분쟁
- 각종 세금 관련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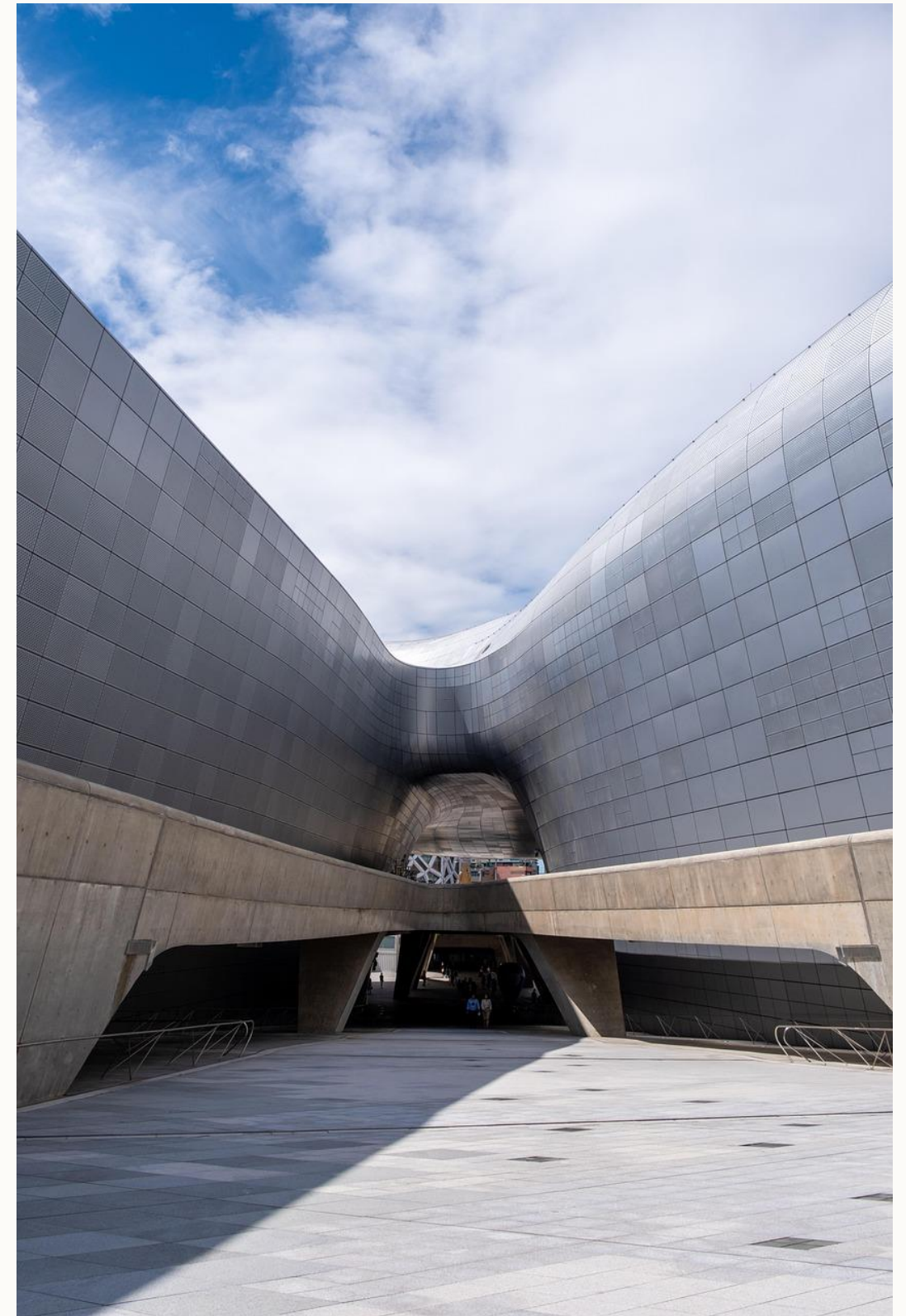


— 행정소송의 당사자

행정소송에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 등)
- 중앙정부 기관장(세무서장·장관 등)

정확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소송의 첫 단계이며,
처분서에 명시된 처분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할 법원

1

일반 원칙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2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

3

부동산 관련 처분의 경우

해당 부동산 또는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도 관할권 있음

농어업인은 처분을 받은 후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제소기간

일반적인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불안정한 행정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짧은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특별 제소기간

일부 처분은 더 짧은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토지수용: 60일 이내

징계: 30일 이내

⊗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제기되더라도 각하됩니다.

— 행정의 적법성 판단 구조

1단계: 절차의 적법성

행정절차법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개별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행정절차를 준수했는지 검토

2단계: 법률적 근거 확인

해당 행정행위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법률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3단계: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

—• 농지 관련 행정쟁송 [1]

농지취득자격증명미발급처분 취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대응 방법

-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 (농지 여부는 실제 현상에 따라 판단)
- 취득 전에 불법건축에 대한 조치권원이 없다는 주장
-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



• 농지 관련 행정쟁송 [2]



I 농지처분명령 취소

이미 취득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 일부라도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
- 불가피하게 농업경영을 하지 못한 상황 입증

☐ 상속으로 취득한 10,000m² 이하의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가 없습니다.



농지 관련 행정쟁송 [3]



Ⅰ 농지전용불허처분 취소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주택 건축을 위한 전용허가가 불허된 경우, 인근 개발사정이나 토지 위치의 특수성을 입증하여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Ⅰ 농지원상회복 및 복구명령 취소

농지 성토 후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개발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는 점이나, 경작을 위한 작업으로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행정쟁송

I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거부에 대응하는 방법

-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 입증
-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관광농원 등의 경우에도 농업경영의 실질이 있음을 입증



— 보상금 관련 행정쟁송

I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청구 대상

농지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될 경우, 토지 보상금과 별도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해당 공익사업 시행 기간 내에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상 금액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작자는 수용면적에 단위 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 제한 관련 행정쟁송

I 영업정지처분 취소

영업정지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 시료채취 과정의 문제점 지적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영업의 연속성을 위해 과징금으로 전환 요청



농어업인도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농산물 품질 관련 행정쟁송

I 부적합농산물수거명령처분 취소



검사 과정 문제 제기

농약 잔류허용기준 검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측정 오류 주장



외부 요인 입증

인근 지역 방역작업 등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 제시



자기책임원칙 부정

농어업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오염임을 입증



— 개발행위 관련 행정쟁송



I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농지나 재배사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된 경우의 대응

- 농지의 보존 필요성이 적다는 점 입증
- 주변에 허가된 유사사례 제시
-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합성 강조
- 경관 훼손 우려가 적다는 점 입증



● 진입로 관련 행정쟁송

I 진입로사용불허가처분 취소

- 1 — 문제 상황
맹지에 있는 농지의 경우 공로와 연결되는 토지(구거 포함)의 사용허가가 필요
- 2 — 불허가 사유
행정청이 공공용지 보존 등을 이유로 진입로 사용허가를 불허하는 경우 발생
- 3 — 대응 방법
해당 농지의 사용을 위해 진입로가 필수적이라는 점, 대체 경로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
- 4 — 승소 가능성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경영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산업재해 관련 행정쟁송

I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농어업인의 산재 관련 대응 방법

- 업무 수행 과정에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
- 농어업 작업의 특수성과 위험성 강조
-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자료 확보
- 유사 사례의 승인 사례 수집



—• 사용료 관련 행정쟁송

I 사용료부과처분 취소

문제 상황

스마트팜 등 대규모 농업시설을 경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으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

다툼의 핵심

해당 부지 및 시설물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 판단

대응 전략

일반재산일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대부계약의 대상이므로 사용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주장



• 지원금 관련 행정쟁송



I 지원금(보조금)환수처분 취소

농어업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 환수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주장
- 지원금 사용의 적법성 입증
-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 환수 시 비례원칙 위반 주장

① 지원금의 종류: FTA 폐업지원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어업 관련 행정쟁송 [1]

I 어업면허승인처분 취소

인접어장 및 타 업종과의 민원·분쟁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여 면허를 승인받을
가능성 있음

I 면허양식장대체개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대체지
개발처분이 취소된 경우, 경제적 손실의
중대성을 입증하여 다룰 수 있음

I 어촌계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인근 어촌계와의 업무구역·경제권 중첩 등
을 이유로 인가신청이 반려된 경우, 수산업
협동조합법이 정한 요건 충족을 입증하여
설립 가능



• 어업 관련 행정쟁송 [2]

I 어업정지처분 취소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어업정지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 위반행위가 없었음을 입증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함을 주장
-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
- 정지 기간의 과도함 주장



● 집행정지의 이해

개념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활용 가치
처분의 효력을 즉시 막아 실질적인 구제 가능



목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

신청 시기
본안 소송(심판)이 계속 중일 때만 신청 가능

심사 기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

● 집행정지와 가처분의 차이

구분	집행정지	가처분
적용 영역	행정소송	민사소송
신청 시기	본안 소송 계속 중에만 가능	본안 소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대상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분쟁 대상인 물건이나 권리관계
목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권리 보전 또는 현상 유지

농어업인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쟁송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처분서 확인

처분의 내용, 근거법령, 처분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

2

제소기간 확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제소기간 계산

3

증거 수집

관련 서류, 사진, 증인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 확보

4

법률 검토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검토

5

전문가 상담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 검토

[

감사합니다

]